

제5회 열린포럼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토론회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hanmail.net

미래 한국의 먹거리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과학기술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보상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인 전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보상체계 개선과 복지증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는 지난 12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다섯번째 월례 열린포럼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년제도, 공제제도 등에 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인의 우대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란 제하의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 정책'을 소개했고, 김성년 과총 대전지역연합회 회장이 '과학기술인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승구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이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새롭게 시행되는 과학기술인 공제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박승덕 과학기술원 이사, 이은정 경향신문 기자가 '정부 정책'에 대해,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충섭 고려대 객원교수, 장하경 광주대 교수, 최재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과학기술인 정년제도'에 대해, 오명환 단국대 부총장과 유장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인 공제제도'에 대해 개선방안 및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제5회 열린포럼

〈제1 주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 정책

- 발표 :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

한 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과학기술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일과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행정을 혁신하는 일을 해왔다. 30개 중점 추진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기술료의 연구비 지급비율을 35%에서 50%로, 연구활동진흥비를 급여액의 7%에서 15%로 확대한데 이어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연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연구비는 씹짓돈'이라는 비판이 다시 안나오도록 해야 한다.

연구비 운용에 있어서도 국가연구개발공동관리규정을 개선해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운영경비를 실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비 지출시 항목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연구행정전담요원을 배치, 행정 및 재정관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중이다.

교육인적관리부에서 해오던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용자제도를 과학기술부에서 전담토록 했으며, 향후 포괄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해 우리 나라 이공계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과학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의직 공무원의 경우 기술직 채용을 목

표보다 초과달성했으며 특히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대규모 채용할 계획을 마련중이다.

특별히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의 분류체계를 확대해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기술직이란 꼬리표를 달고 올라가지 않도록 했다. 기술직 꼬리표를 땀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대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병역문제에 있어서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이공계 박사가 중위나 대위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부터 매년 15명씩 장교로 임명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가 전문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28세에서 지난 7월 28.5세로 연장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자격제도 또한 대폭 보완중이다. 그 동안 노동부, 과기부로 이원화돼 있던 기술사 관리를 과기부로 일원화하는데 양측이 합의했으며,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술자격제도 개선과 관련, 기존 기술사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새로



자격을 획득한 기술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9천789억 원의 금액을 출연, 정부출연연구소의 총연구비 중 기본 사업비를 오는 2008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해나가

겠으며, PBS(프로젝트 기반 연봉 시스템)를 보완키 위해 핵심 연구원에 대한 과제 참여율을 80% 이상 보장하겠다.

과학기술인 전공자의 공직자 진출을 확대키 위해 현재 29%인 기술직 이공계 전공자 비율을 2008년까지 34.2%로 확대하겠으며, 30%인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의 비율을 2008년까지 40%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급여 인상 등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정년퇴직 후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 후 기술료 지급을 검토하는 한편 고경력 연구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의 퇴직공제사업을 통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이달 초 공제회법을 개정했으며, 정년 후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



후 기술료 지급 검토 및 고경력 연구자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확충중이다. 현재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에 60세 이상 노령 과학기술인의 수는 2천49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순직 과학기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6년 5억원을 투입해 연구기획 평가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토론 1 : 박승덕 한국과학기술원 이사]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구현장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과거 70년대 KIST 연구원들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지금은 어떤가. 대학교수에 비해 연구원 보수가 훨씬 낮다.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연구비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토론 2 : 이은정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최근 정부 등의 노력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젊은 과학기술자들은 편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웰빙형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애국적 과학주의만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젊은 과학기술인의 문화를 고려해 '웰빙형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연구원들의 경제가 매우 빈약하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연구원들이 공부하는 기간도 길고, 연구수당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50대 이후 비전마저 불투명할 때 무슨 생각을 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웰빙형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5회 열린포럼

〈제2 주제〉



과학기술정년제도 개선방안

- 발표 : 김성년 과총 대전지역연합회 회장 -

우리 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18년에 고령화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이전되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평균 수명은 2001년 76.5세였던 것이 2020년에는 81세로 상향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연령 계층별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노인층에 대한 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에는 2.2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력난은 연구직에 있어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근래들어 대덕연구단지에서는 많은 연구직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력 유출에는 이유가 있다. 2005년 대덕단지 설문조사(응답자 수 1천102명)에서 55%가 연구 분위기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26%는 급여에 대해, 19%는 고용불안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PBS체제로 인해 연구원들이 연구비(인건비 포함) 확보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적평가에 따른 퇴출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고, 재교육 기회 부족, 경력에 같은 대학교수에 비해 80% 수준인 급여에 대한 불만, 정년단축 및 노후대책 미비 등의 원인 때문이다. 시급히 연구원의 정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는 최근 연구원 정년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고령자 해고금지, 연금 또는 임금 커브제 등의 정책을 선택했다. 이웃 일본과 독일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등 정년연장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현행 정년 61세를 기준으로 연봉제와 연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가 61세 이후 임금을 조정하고 무정년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토론 1: 오명환 단국대학교 부총장]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70~75세까지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풍토가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 연구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령 연구원들을 (연구와 관련된) 각종 기획평가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 연구행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 2: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매년 우리 연구원내에서 60~90명 정도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있다. 그들 중 3분의 2가 대학교수로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젊은 연구자들이 출연(연)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현재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노후 쪽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년연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토론 3: 유장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차기회장]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놓고 정부측과 과학기술인들간에 큰 갭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출연연)연구현장에서는 “오죽 못났으면 연구원을 하느냐”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 1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뽑는데 500명 정도가 몰렸는데 모 출연연에서 선임연구원 1명을 뽑는데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사태도 발생했다. 연구소를 축소시켜서라도 출연연이 기반연구에 충실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덧붙여 연구자들은 실력 없는 연구자들을 걸러내는 장치를 원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앞서 이 같은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 주제〉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개선방안

- 발표 : 이승구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

공제회에서는 최근 과학기술인 1천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 결과 직장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46점으로 '보통'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복지후생사업과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며 공제회의 역할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참여자의 56.1%가 공제회가 복지사업 수행기관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51.2%는 공제회의 조속한 복지사업 시행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회원들이 초기 단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대여 서비스(41.1%), 과학기술인 복지카드 발급(37.8%), 콘도할인 및 예약 서비스(31.9%) 등으로 나타났다. 중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레저타운 건설(42.6%), 실버타운 건설(40.4%), 여행서비스(34.4%), 공동주택 건설(30.7%), 보육시설 운영(21.1%) 등으로 나타났는데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을 수립할 것이며, 대여사업, 콘도이용 서비스, 복지카드 발급은 2006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공제회의 운영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공제회는 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인의 기대와 여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나 정작 공제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서 방관자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공무원, 교원 등 사회를 이끌어가는 다른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과학기술인들은 이러한 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관이므로 과학기술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퇴직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을 상기해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

[토론 1: 김충섭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객원교수]

지금의 공제회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었다. 공제회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5%의 추가부담금을 정부가 힘들면 각 기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200억 원 역시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선 연구원들의 의견이다. 연구원들의 참여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토론 2: 최재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기업 연구원들은 출연연구소와는 다른 기업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제회 운영에 있어 기업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많은 수의 기업 연구원들이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참여할 경우 군인공제회보다 가입자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연구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내의 순환근무 문제 등 기업 내부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토론 3: 장하경 광주대 사회복지학교 교수]

인문사회학을 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맡게 됐다. 처음에는 인문사회계에 비해 과학기술계 재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놀랐다.

그러나 과학기술인들의 보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대해 또 한번 놀랐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부서에서 자녀학자금 지원, 콘도 등의 복지시설이 없다는데 크게 놀랐다. 향후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과학기술인의) 노후 문제와 같은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㉞